

소송의 취지와 경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저는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병일입니다. 저는 구글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 소송의 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송은 단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글로벌 인터넷 감시체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빅테크의 공모와 책임을 묻고, 그러한 감시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폭로된 문건들에 따르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인권활동가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활용하여,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내려진 1심](#), 2017년 2월 16일 내려진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한국 법에 따라 개인 이용자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고, 열람 및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추가 심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외국)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침해가 문제될 경우 국내 법원에 해당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소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졌고, 구글은 대법원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열람권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를 비롯한 모든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법령상 비공개의무에 따라 저희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소송은 몇몇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 정부 및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보다 빅테크 플랫폼의 전 세계적인 권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빅테크 플랫폼의 권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저희는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구글 열람권 소송의 연혁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ct.jinbo.net/wp/cases-google/>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제언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팀 팀장)

개인정보 열람은 알권리와 선택권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누구(제3자)에게 제공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 사항은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등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그리고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개인정보 열람권은 정보주체, 즉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또는 삭제도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 법령과 현실의 괴리

다수의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절차는 쉽게 해 놓고 있지만, 개인정보 열람 안내나 절차,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또는 삭제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개인 맞춤형 답변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표기된 형식적인 수준의 답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정 또는 삭제 요구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원 탈퇴 외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구글 개인정보 열람 합의의 의미와 한계

오늘 구글 개인정보 열람 종결 합의에 따라, 한국 이용자에게 한국어 개인정보 열람메뉴 제공과 일부 개인정보 정책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다. 그러나 아쉬움과 한계도 크다.

첫째, 오랜 기간 권리 실현이 제한되었다. 구글에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한 지 11년 만에 합의로 가능해졌다. 법령에는 개인정보 열람 신청 후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 23일에서 합의한 2026년 6월 2일 기준으로 3,967일이 경과해 권리 실현이 가능해졌다. 안주면 받을 수 없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열람 회피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 SKT의 고객 유심정보 유출이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에 민낯을 볼 수 있다. 이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옥션 약 1,080만명 개인정보 유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약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2012년 KT 약 870만명 고객정보 유출, 2013년 KB카드·롯데카드·NH카드 등 약 1억 400만건의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 2014년 홈플러스 약 70만명의 고객정보 판매, 2015년 인터파크 1,030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

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구글 개인정보 열람도 마찬가지다. 결국 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유인이 없어진다.

셋째,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개인정보 정책 적용의 한계다. 개인정보 열람은 모든 이용자의 권리이지만, 6명의 원고 중에 개인정보 열람을 인정받은 원고는 2명에 불과하다. 구글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gmail)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열람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 문제점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막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이 잘못 운용되면 대규모 유출이나 제공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AI와 알고리즘 시대에 개인정보 정책은 단순 정보주체의 권리의 문제를 넘어서 편향성 등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빅테크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정책은 시민의 정보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실질적인 개인정보 정책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번번이 경제 활성화와 기업을 이익 우선 정책으로 이용자의 권리는 희생되어 왔다.

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 동의 아래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타 서비스와 연계·분석되어 과도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내외에서 사용자의 행동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는 정보주체의 실질적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2. 책임성 부족 및 정보보호 관리 미흡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부적절한 활용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 회피하고 정보주체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내부관리 체계나 투명한 정보처리 과정이 미흡하며,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구체 절차가 불충분하다.

3.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의 책임 회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은 피해 인정과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다.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당사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하다.

4. 플랫폼 독점과 정보 불균형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수록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통제력이 커져, 일반 이용자는 정보 불균형과 사생활 침해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이슈를 넘어 플랫폼 권력의 남용과 쏠림 문제로 이어진다.

5. 규제 미비 및 공공정책의 무력화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를 우선한 규제가 필요하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책임 강화

국회와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고, 시장과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그동안 국내 매출에 대한 국내 법인세 회피,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 활용, 인앱결제 강제 및 보복행위, 국내 고밀도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요구 등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앞으로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비롯한 이용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구글 소송 소송결과와 의의

2025. 6. 10.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원고 구성, 청구내용

○ 원고들

- | | |
|-------------------------|---------------|
| - 오병일(진보네트웍센터) | 개인계정 |
| - 윤철한(경실련) | 개인계정 |
| - 김00 (함께하는시민행동) | 업무용 기업메일 |
| - 변00 외 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업무용 기업메일/개인계정 |

○ 청구내용

-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와 구글코리아는,
-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 비공개에 대한 **위자료**(50만원) 지급하라.



1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5. 9. 15. 선고 2014가합38116)

○ 구글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에 대한 청구 : **일부인용**

- ▶ 업무용 기업메일 사용자들 : **각하**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보호대상 아님
- ▶ 개인계정, 업무용 개인계정 사용자 : **일부인용**
 - “미국법령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사항 제외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라.”

○ 구글코리아(유)에 대한 청구 : **전부기각**

- 구글코리아는 구글서비스 제공주체 아님

2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 구글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에 대한 청구 : **일부인용**

- ▶ 업무용 기업메일 사용자들 : **각하(1심유지)**
- ▶ 업무용 개인계정 사용자들 : **일부인용 → 각하**
- ▶ 개인계정 사용자들 : **일부인용**
 - ‘비식별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 ‘구글 대시보드’ 중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부족

○ 구글코리아(유)에 대한 청구 : **일부인용**

- ▶ 업무용 기업메일/개인계정 사용자들 : **기각(1심유지)**
- ▶ 개인계정 사용자들 : **기각 → 일부인용**
 - 위치정보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서비스제공자는 구글코리아




2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 Google Inc., 구글코리아

“미국 법령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공개”

○ 비공개의무가 있는 미국법령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 (별첨 참조)




3심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 “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 : 파기환송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할 정당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 법령에 따라 비공개 의무가 있다고 피고 구글이 주장하는 사항이 ①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관련 법령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②이 사건 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 및 ③그 비공개로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함께 심리·검토하였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합의

○ Google Inc.와의 합의 내용

▶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현황 공개

-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구글의 고객, 광고주,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에 제공한 내역 공개
- 미국법령상 비공개의무 해제통보 여부 확인

▶ 한국이용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선사항

- ① 한국이용자들을 위한 **한국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 제공
- ② 한국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한 내역 열람**청구시, 제공여부, 제공사실에 관한 통보 여부, 통보누락 여부 등 확인가능
- ③ **미국법령상 비공개의무 해제 여부** 문의시 개별 확인가능
- ④ 한국이용자들을 위한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선
 - 구글이 수집·처리하는 목적, 방법, 개인정보의 종류 세분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합의

○ Google Inc.와의 합의 배경

▶ 소송기술상 어려움

-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중 제공사실 자체를 비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한국 법정에서 소명하기 어려움
- 구글이 비공개 의무를 지는지 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이용자들이나 한국 법원이 이를 밝혀내는 것에 일정한 한계 있음

▶ 글로벌빅테크기업과 한국이용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

- 원고들의 개인정보 등 제3자 제공내역 확인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용자들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한 구글의 적극적인 입장 고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한 선례, 기준 정립



별지

목 록

1. 비공개 의무에 관한 법령

(1) 미국의 18 U.S.C § 2709(c)(1)

원 문	번역문
<p><개정 전></p> <p>(c) Prohibition of Certain Disclosure.—</p> <p>(1) If the Director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r his designee in a position not lower than Deputy Assistant Director at Bureau headquarters or a Special Agent in Charge in a Bureau field office designated by the Director, certifies that otherwise there may result a danger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nterference with a criminal, counterterrorism, or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interference with diplomatic relations, or danger to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any person, no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or officer, employee, or agent thereof, shall disclose to any person (other than those to whom such disclosure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request or an attorney to obtain legal advice or legal assistance with respect to the request) that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has sought or obtained access to information or records under this section.</p>	<p>(c) 특정 공개에 대한 금지</p> <p>(1)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국장(Director)이나 국장이 지정한 연방수사국 본부의 부국장(Deputy Assistant Director) 또는 연방수사국 지사의 특수요원 지위 이상의 대리인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 대테러 또는 방첩 조사에 대한 방해, 외교 관계에 대한 방해, 여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유선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나 이러한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본 절에 의거하여 연방수사국이 정보 또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접근을 승인 받았음을 어떠한 개인(명령서를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사람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명령서와 관련하여 변호인에게 법적인 조언이나 조력을 얻기 위한 경우 제외)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p>



<현행>	
<p>(c) Prohibition of Certain Disclosure.—</p> <p>(1) Prohibition.—</p> <p>(A) In general.—</p> <p>If a certification is issued under subparagraph (B) and notice of the right to judicial review under subsection (d) is provided, no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hat receives a request under subsection (b), or officer, employee, or agent thereof, shall disclose to any person that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has sought or obtained access to information or records under this section.</p> <p>(B) Certification.—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A) shall apply if the Director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r a designee of the Director whose rank shall be no lower than Deputy Assistant Director at Bureau headquarters or a Special Agent in Charge of a Bureau field office, certifies that the absence of a prohibition of disclosure under this subsection may result in—</p> <p>(i) a danger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p> <p>(ii) interference with a criminal, counterterrorism, or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p> <p>(iii) interference with diplomatic relations; or</p> <p>(iv) danger to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any person.</p>	<p>(c) 특정 공개에 대한 금지</p> <p>(1) 금지</p> <p>(A) 일반적으로, (B)호에 의거하여 증명이 이루어지고 (d)목에 의거하여 국가안보명령서가 제공된 경우, (b)목에 따라 상기 명령서를 수령한 유선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나 이러한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본 절에 의거하여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정보 또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접근을 승인받았음을 어떠한 개인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p> <p>(B) 증명.</p> <p>(A)호의 요건은 연방수사국의 국장(Director)이나 국장이 지정한 연방수사국 본부의 부국장(Deputy Assistant Director) 또는 연방수사국 지사의 특수요원 지위 이상의 대리인이 본 호에 따른 해당 사실의 공개가 금지되지 않아 다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적용된다.</p> <p>(i)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p> <p>(ii) 범죄, 대테러 또는 방첩 조사에 대한 방해</p> <p>(iii) 외교 관계에 대한 방해</p> <p>(iv) 여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p>





(2) 미국의 50 U.S Code § 1861(d)

원 문	번역문
<p>(d)Nondisclosure</p> <p>(1) No person shall disclose to any other person that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has sought or obtained tangible things pursuant to an order issued or an emergency production required under this section, other than to—</p> <p>(A) those persons to whom disclosure is necessary to comply with such order or such emergency production;</p> <p>(B) an attorney to obtain legal advice or assistance with respect to the production of things in response to the order or the emergency production; or</p> <p>(C) other persons as permitted by the Director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r the designee of the Director.</p> <p>(2) (A) A person to whom disclosure is mad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subject to the nondisclosure requirements applicable to a person to whom an order or emergency production is directed under this section in the same manner as such person.</p> <p>(B) Any person who discloses to a person described in subparagraph (A), (B), or (C) of paragraph (1) that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has sought or obtained tangible things pursuant to an order or emergency produc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if such person of the</p>	<p>(d) 비공개</p> <p>(1) 연방수사국이 본 절에 따라 내려진 명령 또는 본 절에 따라 요구되는 긴급제출에 따라 어떤 유형물을 획득하려 하였다거나 획득하였다는 사실은, 하기에서 서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개인에게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A) 상기 명령 또는 긴급제출에 응하기 위하여 상기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개인들에게 공개하는 경우</p> <p>(B) 상기 명령 또는 긴급제출에 따라 그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또는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p> <p>(C) 연방수사국의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대리인이 공개를 허용한 그 밖의 개인들에게 공개하는 경우</p> <p>(2) (A) 상기 제(1)항에 따라 상기 사실을 공개 받은 자에게는 본 절에 따라 상기 명령 또는 긴급제출 대상자와 동일하게 비공개 의무가 적용된다.</p> <p>(B) 제(1)항의 (A), (B) 또는 (C)호에 명시된 자에게 연방수사국이 본 절에 따라 내려진 명령 또는 본 절에 따라 요구되는 긴급제출에 따라 유형물을 획득하려 하였다거나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자는 상기 사실을 공개 받은 자에게 본 절의 비공개 요청을 고지해야 한다.</p> <p>(C) 연방수사국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대</p>



nondisclosur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C)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r the designee of the Director, any person making or intending to make a disclosure under subparagraph (A) or (C) of paragraph (1) shall identify to the Director or such designee the person to whom such disclosure will be made or to whom such disclosure was made prior to the request.	리인의 요청 시, 제(1)항의 (A) 또는 (C)호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개하려는 자는 정보를 공개 받을 자의 신원을 연방수사국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는 해당 요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공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3) 그 밖에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 개인정보 제
공 현황에 관하여 비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2. 제3자 제공 현황 공개의무가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범위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 중

- 1) 기본 인적 정보: 이름,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
일, 지역정보, 신용카드 정보
- 2) 하드웨어 모델, 운영체제 버전, 고유기기 식별자,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전화번
호 포함) 등 기기정보 일체
- 3) 이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인터넷 프로토콜 주
소, 기기 이벤트 정보(다운, 시스템 활동, 하드웨어 설정, 브라우저 유형, 브라
우저 언어, 요청 날짜 및 시간, 참조 URL 등), 웹 기록,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검색어(음성검색 포함) 등 이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입력한 정보,



YouTube로 동영상을 본 시점, Google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방문 시점, Google 광고 및 콘텐츠를 보고 사용한 시점 등 로그 정보(인터넷 사용기록) 일체

- 4) 이용자의 전화번호, 발신자의 번호, 착신전화 번호, 통화 일시, 통화 시간, SMS 라우팅 정보 및 통화 유형 등 전화 로그 정보 일체
- 5) IP 주소, GPS, 주변기기, 기기 센서, Wi-Fi 액세스 포인트, 기지국 등에 관한 정보 및 이를 이용하여 파악한 이용자의 위치에 관한 정보 일체
- 6) 고유 애플리케이션 식별번호, 운영체제 버전 및 종류, 애플리케이션 버전 번호 등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 일체
- 7) 방문한 페이지의 URL, 텍스트의 캐시⁵⁾, 이미지 및 페이지에 있는 기타 리소스, 해당 페이지와 연결된 일부 IP 주소의 목록 검색어 등 브라우저 웹 저장소 (HTML 5 포함)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캐시 등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수집하고 이용자의 기기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한 정보 일체
- 8)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쿠키⁶⁾ 또는 데이터, 부가기능에서 저장한 데이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내역, 이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Google 계정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쿠키, 다른 사이트에 표시되는 Google 기능이나 광고 서비스 등 Google이 파트너(게시자, 광고주 또는 연결된 사이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있을 때 수집·저장한 쿠키, Google 애널리틱스를 통해 수집·저장한 쿠키, Google이 파트너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Google 계정과 연결한 정보, 이용자가 Google에 로그인되어 있을 때 수집되는 정보 등

5) 데이터 접근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래의 요청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저장하여 두는 임시 장소

6)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 이용자가 본 내용, 상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 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IP 주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정보파일

